

[도표] 집행권원의 종류

집행권원의 종류

집행권원의 종류		근거규정	참고사항
민사집행법과	확정된 중국판결(終局判決)	민사집행법 제24조	강제실행이 가능하고 허용되는 이행판결만 집행 권원이 됨.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판결의 확정 증명과 집행문이 필요함. 소멸시효는 10년임(민법 제165조 제1항).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중국판결(終局判決)	민사집행법 제24조	가집행의 선고에 의하여 중국판결은 즉시로 집행력이 발생하므로 집행문을 부여받아 가집행 할 수 있으나, 가집행선고는 상소심에서 그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변경되면 그 한도에서 효력을 잃게 됨. 그러나 집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 집행처분은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음.
	외국법원의 판결에 대한 집행판결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	외국법원의 판결에 기초한 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강제집행을 허가하여야 할 수 있음. 일반판결과 같이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집행이 가능함. 소멸시효는 10년임(민법 제165조 제1항).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집행권원	소송상 화해조서, 청구의 인낙조서	민사집행법 제57조, 제56조 제5호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을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민사소송법 제220조), 이러한 조서도 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이 가능함. 소멸시효는 10년임(민법 제165조 제2항).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민사집행법 제57조, 제56조 제1호	①소송비용상환결정(민사소송법 제107조 제1항, 제2항)②소송비용액확정결정(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③피구조자의 소송승계인이나 피구조자에 대한 유예소송비용의 납입명령(민사소송법 제130조 제2항, 제131조)④증인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결정(민사소송법 제311조 제1항, 제318조, 제326조, 제333조)⑤부동산인도명령{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 제3항(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행문 없이 집행가능)}⑥대체집행에 있어서 채무자에게 비용의 지급을 명하는 결정(민사집행법 제260조 제2항)⑦간접강제에 있어서 금전배상을 명하는 결정(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
	확정된 지급명령	민사집행법 제57조, 제56조 제3호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474조),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권원이 됨. ①지급명령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②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강제집행하는 경우③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지만, 그 이외의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문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민사집행법 제58조). 소멸시효는 10년임(민법 제165조 제2항).

집행권원의 종 류		근거 규정	참고 사항
민사집행법과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집행권원	집행증서	민사집행법 제57조, 제56조 제4호	공증인, 법무법인 또는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가 작성한 공정증서 중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의 기재가 있는 증서(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변호사법 제49조 제1항), 공증인, 법무법인 또는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가 어음·수표에 부착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를 기재하여 작성한 공정증서(공증인법 제56조의2 제1항)를 집행증서라 함.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의 집행문은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내어 줌(민사집행법 제59조 제1항). 소멸시효는 원인채권의 소멸시효기간.
	가압류명령, 가처분명령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301조	가압류 및 가처분명령은 그 자체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집행문의 부여를 요하지 않고 즉시 집행할 수 있음. 다만, 재판이 있은 뒤에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승계집행문의 부여가 필요함(민사집행법 제292조 제1항, 제301조).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하거나 송달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집행하여야 함(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 제301조).
	과태료의 재판에 대한 검사의 집행명령	민사집행법 제60조	과태료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하고, 그 명령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민사집행법 제60조), 집행문의 부여가 필요 없음. 과태료 재판의 효력이 소멸하는 시효에 관하여는 국가의 금전채권으로서 예산회계법에 의하여 그 기간은 5년이라고 할 것임(대법원 2000. 8. 24.자 2000마1350 결정).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민사집행법 제57조, 제56조 제5호	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 화해권고결정은 제226조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에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민사소송법 제231조), 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이 가능함. 소멸시효는 10년임(민법 제165조 제2항).

집행권원의 종 류		근거규정	참고사항
민 사 집 행 법 과 민 사 소 송 법 이 외 의 법 률 에 규 정 된 집 행 권 원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결 정	중재법 제 37조 제2항	중재판정에 기초한 집행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서 집행결정으로 이를 허가하여야 할 수 있음(중재법 제37조 제2항) 일반판결과 같이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집행이 가능 함. 소멸시효는 10년임(민법 제165조 제1항).
	정정보도, 반 론보도 또는 추후보도를 명하는 판결	언론중재 및 피해구 제 등에 관 한 법률 제 26조	정정보도청구의 소, 반론보도청구의 소 또는 추후보도청구의 소는 그 인용을 조건으로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한 간접 강제신청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고, 정정보도 청구의 소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반론보도청구의 소 또는 추후보도청구의 소에 대한 재판은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재판하며,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언론사에 정정보도·반론 보도 또는 추후보도를 명할 수 있음(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파산채권자 표, 회생채권 자표, 회생담 보권자표	채무자 회 생 및 파산 에 관한 법 률 제535 조, 제292 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정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채권조사의 기일에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파산채권자표의 기재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채무 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35조 제1항). 채권자는 파 산종결 후에 파산채권자표의 기재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35조 제2항). · 채무자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 또는 특별조 사기일에 그 권리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한 경우 확정 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하여는 회생채권자표 또 는 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는 채무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292조 제1항).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회생절차종 료 후 파산선고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2조 제2항) ·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임(민 법 제165조 제2항).

집행권원의 종 류		근거규정	참고사항
민 사 집 행 법 과 민 사 소 송 법 이 외 의 법 률 에 규 정 된 집 행 권 원	회 사회 생 절 차에 있어서 이사 등에 대한 출자이 행청구권 또 는 그 책임 에 기한 손 해 배 상 청 구 권의 조사확 정의 재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5조, 제116조, 제117조	법원은 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 나 직권으로 발기인·이사(상법 제40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감사·검사인 또는 청산인에 대 한 출자이행청구권이나 이사등의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권의 존부와 그 내용을 조사확정하는 재판을 할 수 있음. 이 에 대한 이의의 소가 기간(1월) 안에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취하된 때 또는 각하된 때에는 조사확정의 재판은 이행을 명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 이의의 소가 제기되는 경우에도 조사확정의 결정을 인가하거나 변경한 판결은 강 제집행에 관하여는 이행을 명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5조, 제116조, 제117조).
	조 정 조 서 와 조정 에 같 음 하는 결정	민사조정법 제29조, 민 사 조 정 법 제30조, 제 34조 제4항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민사조정법 제29조), 조정담당판사는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또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 정한 사건에 관하여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직권으로 당사자 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인의 신청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하여야 하고(민사조정법 제30조), 피신청인이 조정기 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여야 하 는데(민사조정법 제32조), 이에 대하여 조서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이의신청이 취하 또는 각하 된 때에 위 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 이 있으므로(민사조정법 제34조 제4항), 이러한 화해조서와 조정에 같음하는 결정은 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이 가능함. 소멸시효는 10년임(민법 제165조 제2항).
	가사소송법에 의한 심판 및 조정 또는 조 정에 같음하는 결정	가사소송법 제41조, 제 59조 제2항	가사소송에 있어서 금전지급, 물건인도, 등기, 그 밖에 의무 의 이행을 명하는 심판은 집행권원이 되고(가사소송법 제41 조), 조정 또는 확정된 조정에 같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 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 이 경우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이 가능함. 소멸시효는 10 년임(민법 제165조 제2항).
	소액사건심판 법에 의한 이 행권고결정	소액사건심 판법 제5조 의7 제1항	법원은 소액심판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정으로 소장 부분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피 고가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의신청이 취하 또 는 각하결정 확정시에는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음(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 소멸시효는 10년임(민법 제165조 제2항).

집행권원의 종 류		근거규정	참고사항
민 사 집 행 법 과 민 사 소 송 법 이 외 의 법 률 에 규 정 된 집 행 권 원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조정조서와 중재조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5조	조정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와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경우(피신청 언론사가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 및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직권으로 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다만, 당사자가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이 경우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이 가능함.
	당사자가 예납하지 아니한 비용의 수봉(收捧)결정, 소송구조 및 구조의 취소에 의한 비용추심의 결정	민사소송비용법 제12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31조, 제132조	법원이 당사자의 예납하지 아니한 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제1심 수소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예납하지 아니한 당사자나 판결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한 당사자로부터 수봉(收捧)하여야 하는데, 이 결정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이 규정은 민사소송법 제131조 내지 제133조의 경우에 준용함(민사소송비용법 제12조). 이 경우에는 집행문이 필요 없음.
	비송사건절차법상의 과태료의 재판에 대한 검사의 명령	비송사건절차법 제249조	과태료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써 이를 집행하고, 이 경우 그 명령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비송사건절차법 제249조), 집행문의 부여가 필요 없음. 과태료 재판의 효력이 소멸하는 시효에 관하여는 국가의 금전채권으로서 예산회계법에 의하여 그 기간은 5년이라고 할 것임(대법원 2000. 8. 24.자 2000마1350 결정).
	비송사건절차의 비용의 재판	비송사건절차법 제29조 제1항	비용의 채권자는 비용의 재판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비송사건절차법 제29조 제1항).
	벌금, 과료, 몰수,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 또는 가납의 재판에 대한 검사의 명령	형사소송법 제477조	벌금, 과료, 몰수,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 또는 가납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하고, 위의 명령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형사소송법 제477조), 이 경우에는 집행문이 필요 없음.
	이의신청에 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1항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된 때에는 민사소송법상의 확정판결이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서 정본은 집행력 있는 판결의 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1항). 재결확정증명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 할 수 있음.

집행권원의 종 류		근거 규정	참고 사항
민 사 집 행 법 과 민 사 소 송 법 이 외 의 법 률 에 규 정 된 집 행 권 원	특허권, 실용 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의 심판, 항고 심판, 재심에 관하여 특허심 판장이 정한 심판비용액 또 는 심판관이 정한 대가에 관하여 확정된 결정	특허법 제 166조, 실용 신안법 제33 조, 디자인보 호법 제154 조, 상표법 제153조	특허법에 의하여 특허심판원장이 정한 심판비용액 또는 심 판관이 정한 대가에 관하여 확정된 결정은 집행력 있는 집 행권원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이 경우 집행력 있는 정본 은 특허심판원 소속 공무원이 이를 부여함(특허법 제166조, 디자인보호법 제154조, 상표법 제153조). 집행문이 필요 없음.
	유죄판결의 선 고와 동시에 하는 배상명령	소송촉진등 에 관한 특례 법 제34조 제1항, 가정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례법 제 61조 제1항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 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소송 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보호처분결정서의 정본 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 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1조 제1항). 이 경우에는 집행문이 필요하지 않음. 소멸시효는 10년임(민법 제165조 제2항).
	변협 징계위원 회의 과태료결 정, 소관지방 법원장의 소속 법무사에 대한 과태료의 결정	변호사법 제 98조의5 제2 항, 제90조 제4호, 법무 사법 제48조 제2항 제3호, 제3항	변호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 중 과태료의 결정은 집행력 있 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이 있고, 검사의 지휘로 이를 집행 함(변호사법 제98조의5 제2항, 제90조 제4호). 법무사의 징계의 종류 중 과태료의 결정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 력이 있으며, 검사의 지휘로 이를 집행함(법무사법 제48조 제2항 제3호, 제3항).